시 론

민생 외면 정치, 서늘한 밥상



김 영 집
광주대 특임교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요즘 살기 어떠십니까? 열에 아홉은 손사래부터 친다.

"정치는 날마다 싸움질인데, 손님은 발길을 끊었고 문 닫을 상황이다."라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수출은 늘었다는데 국민 실생활은 위기라니? 쏠림 때문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상위 5개 업종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삼전닉스 3분기 영업이익만 185조다.

이런 경제효과가 국민 전체 생활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사상최대 이익을 실현하는데도 주가는 폭락장을 이어 가니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아니거늘 국민들의 분통은 정권에게 향한다. 주식은 희망이 없고 민생은 어려우니 다른 어떤 성과를 내도 안 통한다.

전남광주지역의 경제적 침체는 더 심하게 느껴진다. 기업 가동이 중단되고 가게 문이 닫히고 있다. 통계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증명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3선에 갇혀 있다.

체감경기의 기준선인 10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장 제조업체 10곳 중 5-6곳 이상이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운영이 어렵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골목상권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가혹하다. 광주의 자영업 폐업률은 11.8%에 달해 전국 최상위권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60% 이상이 창업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실정이다. 충장로와 상무지구, 목포, 여수·순천의 핵심 상권은 물론 골목골목 점포마다 '폐업'과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을 떠받치던 핵심 제조업 부품 공급망과 건설업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자영업 폐업률이 67%에 달해 지방 청년 유출마저 늘어나고 있다.

어딘가 큰 구멍이 뚫린 느낌이고, 앞뒤가 다 답답한 것이 요즘 지역경제 사정이다. 그런데 지역 정치권과 행정은 날마다 반도체 AI 에너지 이야기만 하고 있다.

800조 반도체 공장 조성은 지역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큰일이다. 온 힘을 다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I 대전환도 RE100 에너지도 우리의 살 길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 어렵고 힘들다. 앞으로의 미래가 희망적이더라도 지금이 위기라면 지금의 문제부터 해결하며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통합특별시 행정의 지역 민생회복 대책을 묻고 싶다. 도대체 장밋빛 미래 말고 현재 민생경제 위기를 어떻게 하려는가. 아마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기,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답이 정치행정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정치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거기서부터 해야 한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치명적인 참패를 당한 것은 불법적 전쟁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패인은 경제실패, 민생파탄이었다.

민주당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다음 총선 민주당 패배는 현실이 될 수 있다.

호남 민주당은 괜찮다고? 민주당이야 찍겠지만 사람은 바꿀 것이다. 민생경제 침체는 통합시 행정에도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가 좋다고 시장을 응원하고 시정을 지지할 것인가.

노자는 도덕경 3장에서 "허기심 실기복(虛其心, 實其腹)"을 이야기했다. 관념을 비우고 실질적 삶과 먹거리를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정치라고 했다. 관자는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안다고 했다."

문제는 답이 분명치 않다고 시작부터 작은 일부터 하지 않는 무책임과 무능은 없어야 한다. 민주당과 통합시는 당장 민생경제대책을 세워 실행하기 바란다. 힘든 사람들이 괴로운 계절이 오고 있지 않는가.

의정칼럼

창평 예비군 훈련장 이전, 국가 주도 추진해야



김 석 민
담양군의원

1981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에 군부대와 예비군 사격장이 들어섰다. 강산이 네 번 넘게 바뀌는 동안 창평 주민들은 총소리를 일상의 소음 삼아 견뎌 왔다.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느림의 고장'에 총성이 멈추지 않는 모순을 언제까지 주민들에게만 감수하라고 하겠는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전국 208곳의 예비군훈련장을 40곳의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낡은 훈련장을 첨단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통합의 무게가 창평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광주와 인근 지역 대대를 창평으로 통폐합해 운영하려 하면서도 창평 주민과 담양군에 충분한 설명도, 협의도 하지 않았다.

현재 창평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기부 대양여' 방식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담양군이 새 부지에 훈련장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창평의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지난 10월 주민설명회에서 공개된 용역 결과를 보면 총사업비는 약 2천92억원인데 기존 부지를 개발해 거둘 수 있는 수입은 약 870억원에 그친다. 담양군이 메워야 할 약 1천222억원은 올해 군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가까운 돈으로 군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구조적으로 농촌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옛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메우는 구조여서 땅값 비싼 도심이 아니면 애초에 셈이 맞지 않다. "옮기고 싶으면 비용을 대라"는 말은 결국 농촌 주민들에게 "옮길 생각을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훈련장을 들인 것도, 그 규모를 키운 것도, 통폐합을 계획한 것도 모두 국방부다. 더구나 국방은 국가사무이다. 국가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치르는 것이 순리다.

창평에 실내사격장을 짓겠다는 국방부의 계획도 해법이 아니다. 소음을 조금 줄이는 대신 훈련장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가 예산을 들여 과학화 훈련장을 지을 계획이라면 45년을 견딘 창평에 덧대어 짓기보다 주민 피해가 적은 곳에 새로 짓는 편이 갈등도 줄이고 예산도 제대로 쓰는 길이다. 군사시설을 옮기거나 통합하는 사업에 쓰도록 만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라는 국가 재원도 이미 있다.

창평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국방부가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국가 재정으로 직접 책임지는 국가사업이 돼야 한다. 이전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겪을 피해를 줄일 대책도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한다.

45년 동안 국가에 내어준 창평의 땅은 담양군·주민과 함께 활용 방안을 세워 주민의 삶터로 되돌려야 한다.

창평 주민들은 안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45년 동안 묵묵히 그 무게를 나눠 져 왔을 뿐이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게 해 달라는 것이 지나친 요구일 수는 없다. 기부 대 양여라는 계산서를 내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이전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45년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군과 지역이 함께 사는 상생의 첫걸음이다. 총성 대신 돌담길 발소리가 들리는 창평을 이제는 국가가 돌려줄 차례다.

독자투고

딥페이크 범죄, 장난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다



경찰청이 2025년 발표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천438명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1.8%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범죄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친구나 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가해자는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일상과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법적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한번 유포된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완전한 삭제도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 합성물을 발견했을 때 열어보거나 공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피해자를 탓하기보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장난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인격과 일상을 침해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감을 갖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찬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전남광주 미래차, 구체적인 실행 전략 필요

기아가 오는 2029년까지 전남광주지역에 약 3조원을 투자해 미래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목적기반차량(PBV)을 중심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투자는 내연자동차 중심이었던 지역 자동차 산업을 전동화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전남광주시는 최근 기아, 전남대학교, GIST와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PBV를 활용한 기술 실증과 사업화 협력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기반 확충, 그리고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또 PBV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전용 차량 개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PBV 셔틀 서비스 실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PV5 WAV 기반 원격운전 기술 실증, 물류·여객 등 목적에 따라 차량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이지스 완(Easy Swap) 기술 실증 등이 구체적인 사항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교통·물류 서비스에 적용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PBV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만큼,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과 지역민이 체감하는 산업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과 투자계획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생산 기반과 지역의 인공지능(AI)·첨단산업 역량을 연계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더욱 반가운 이유다.

여기에다 지역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도 확대된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반도체 분야 투자에 이어 기아의 대규모 투자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안주해선 안된다. 투자 효과가 지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평동 일대 하수구 정비 사업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 일대가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주거 공간으로 거듭난다. 상습 침수 구역인 평동 일대의 항구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총 496억원 규모의 하수도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침수 걱정에 발만 동동 굴러야만 했던 지역민들에게 소중한 일상과 산업 활동을 지키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평동 일대는 2020년과 2025년 잇따라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으며 근본적인 배수 체계 개선이 시급했다. 실제로 비가 올때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이곳에서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침수에 대한 불안감과 각종 피해를 호소해 왔다. 여기에다 산업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물류와 교통 마비로 직결되는 복합적인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무엇보다 방재 인프라 구축이 절실했다.

그 와중에 광산구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에 평동 지역이 전남광주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지역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한 광산구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셈이다.

사업 내용도 눈길을 끈다. 광산구는 확보한 국·시비 등 총 496억원을 투입해 옥동·월전동 일대에 하수관로 약 4㎞를 신설·정비하고 분당 500t의 배수 능력을 갖춘 빗물펌프장 1개소와 빗물받이 160여개소를 새롭게 조성해 침수 대응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배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사업이 완료되면 평동역 주변에 밀집한 공장 110여동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옥동마을 160가구와 춘전마을 64가구 주민들의 고질적인 도로 침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물류와 교통 마비로 직결되는 평동로 등 주요 도로 6㎞ 구간과 지하철 평동역사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평동산단의 안정적인 산업 활동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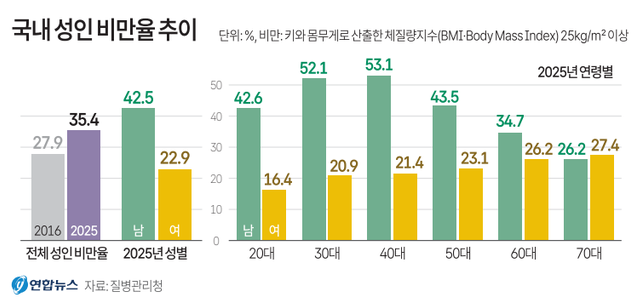
광산구는 침수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 정비계획을 확정해 오는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성인 비만율 10년간 상승…30·40대 男 절반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5.4%를 기록했다. 특히 30·40대 남성은 2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비만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비만은 키와 몸무게로 산출한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 25kg/㎡ 이상으로 정의된다.

성인 비만율은 10년 전(27.9%)보다 7.5% 상승했다. 최근 1년간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고 노력한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 주관적으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인지율은 45.1%로 10년간 꾸준히 올랐다. 반면 체질량지수 18.5kg/㎡ 미만인 저체중률은 4.2%로 계속 하락했다.

비만율은 성별과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성 비만율은 42.5%로 여성(22.9%)보다 약 1.9배 높았다. 특히 30대 남성 비만율은 52.1%, 40대 남성은 53.1%로 30·40대 남성 2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이다. 남성 비만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달리 여성 비만율은 20대에서 16.4%로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상승해 70대 이상에서 27.4%로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瀕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